

순천만동물영화제 기부금 부실수사 의혹

명백한 증거 있음에도 사건 관계자 무혐의 처분 제5회 해축식 3개월 후 기부금 수령, 봐주기 수사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민간기부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민간단체가 영화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기부금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와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순천경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려 민간단체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최근 공개된 순천시 자료에 따르면 제5회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임기는 2017년 12월로 이미 끝나고 이들에 대한 해축도 한달 후인 2018년 1월 26일 정식 회의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제6회 동물영화제에 관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

그러나 해축식을 통해 엄연히 임기가 종료된 일부 몇몇 사람이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물론 2018년 열린 제6회 행사를 치르며 사업계획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 민간기부금 1억 3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대부분을 인건비로 받아 챙기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

결국, 인건비로 1700만원씩 수령 받은 김모, 양모, 임모씨 등 3명이 주요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2017년 제5회 집행위원들에 대한 공식적인 해축절차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업무의 연속선상 2018년 제6회 행사를 위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금을 신청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 정식 회의 때 제5회 동물영화제 성과 반성 회의에서 해축식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날 열린 회의록에서도 2018년 기부금 수령에 깊게 관여한 양모 위원이 "오늘(당시) 회의가 제5회 집행위 해축식인지 제6회 계획을 추진하는 자리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문화예술과장은 "오늘 회의는 제5회 집행위 해축식 자리다"고 확실히 매듭 짓는 발언이 명시돼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은 기부금 수령 3개월 전 이미 순천시에 의해 해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내용이 드러나자, 순천경찰이 상당자료를 확보하고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간단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많다.

제5회 집행위원이었던 모 인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6회 집행위원

회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있어 황당했는데, 이렇듯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이 기부금 부당수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다"며 꼬집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단체의 범죄 의혹을 수사하면서 방향을 잘못잡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지시까지 내리면서 보강수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확인되자,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관계를 두고 "경찰이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는 등 일부에서는 해당 단체와의 유착의혹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순천경찰은 지난 5월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경찰에 1차 보강수사 지시를 한데 이어 또다시 불기소의견으로 올라온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편파 수사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죄송하다. 일단 검찰에 의견을 보냈으니 결과를 지켜보고 검찰이 최종 판단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비가 와도 좋아 전국적으로 정맞비가 내린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관광객들이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광주시, 영광 원전 방사능 누출 대비 메뉴얼 수정 계획 철회해야”

탈핵단체, 메뉴얼서 '타 지역 대피 계획' 삭제 비판

광주 지역 탈핵단체는 10일 "광주시가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 메뉴얼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철회하고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지난달 25일 방사능 누출사고 관련 행동메뉴얼 정비 용역 최종발표회에서 의미·내용 면에서 모두 후퇴한 내용을 밝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용역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광주 지역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육내 대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면서 "기존의 메뉴얼에 있었던 광주시의 소개(다른 지역으로의 대피) 계획은 삭제할 것임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시는 지난 2013년 1월 방사능 방재대책 및 시민행동요령"을 작성, 배부했다"며 "광주는 국가지정 비상계획구역인 핵발전소로부터 30km 이내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방사능 누출의 영향을 고려해 비상계획구역 외

의 자치단체로서는 비상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고 밝혔다.

또 "용역 수행과정에서 참여했던 평가위원들이 여러 차례 문제점과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비상계획보다 후퇴한 내용이 도출됐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100km 이상 떨어진 곳, 체르노빌 사고는 반경 40~50km 내 지역이 방사능 영향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방사능 누출 사고는 날씨, 풍향·풍속 등에 따라 피해지역을 예단할 수 없다. 오히려 30km 내에 위치한 지역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반면, 40km 이상 떨어진 지역도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 광산구는 영광 원전으로부터 35km, 중삼면역은 40~50km가량 떨어져 있다"면서 "영광 원전의 중대 사고가 광주에 미칠 영향을 미미하게 평가한 시뮬레이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따른 행동메뉴얼 내 소개 계획 삭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남규 기자

“시, 공무원 차별 철폐 위해 적극 나서야”

광주시민사회단체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공무직 노동자 400여 명이 하루빨리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선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은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진보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5개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노동자들이 퇴직금 제도 개선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열흘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17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각 구청은 말바꾸기와 무책임한 태도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은 도로·하수·공원·녹지·보건소·복지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노동자"면서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임금·인사·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차별받고 있다. 차별은 직장 내 복지 서열을 만들어 공무직 직종 간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지역 주민인 노동자의 삶이 바뀌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5월 광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이다"면서 "지역 노동자들이 차별로 인한 존엄·노동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와 5개 자치구는 세계수업연수포럼대회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시민의 손발이 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비군훈련 불참 '여호와의 증인' 20대 전 신도 '유죄' 선고

“신념 깊고 진실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군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하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처됐다.

재판장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도 양심에 어긋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항도예비군설치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징역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수차례의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인 2014년 3월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갖게 됐으며, 이후 꾸준히 종교 활동을 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모두 마친 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받게 되면서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정에 비춰 보면 A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양심'에 어긋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그러나 "A 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처럼 2017년 5월부터 해당 종교를 믿지 않게 됐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형사처벌과 납부해야 할 벌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 하는 것만으로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양심에 어긋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A 씨의 양심, 즉 종교적 신념을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변행동기는 충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현재 훈련을 받는 점,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기관, 자활치료, 영민 민해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임신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미지 여의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